

안녕하세요, 부평구문화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평구문화재단입니다.
재단의 지난 19년을 돌아보며 다가올 20주년을 준비합니다.
도시가 바라본 재단, 재단이 그려갈 도시가 궁금하신 모든 분들을 모십니다.

2025.01.15.(수) 14:00

열아홉, 2025년까지 부평구문화재단은.

2025.01.16.(목) 14:00

스물, 2026년부터 부평구문화재단은.

스물, 2026년부터 부평구문화재단은.

구분	내용	시간	소요시간
1부		사회: 배운수 기획경영본부장	
개회	내빈 소개 및 축사, 개회사	14:00~14:05	5'
2부		좌장: 안영노 안녕 소사이어티 대표	
발제1	지역문화재단 역할전환시대 운영방향과 전략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05~14:20	15'
발제2	광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재단의 상생 공규현 인천문화재단 경영본부장	14:20~14:35	15'
발제3	도시에 '생기'를 더하는 지역문화/재단 고영직 문학평론가	14:35~14:50	15'
휴식	휴식 및 토론 준비	14:50~15:00	10'
종합토론	염신규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신정호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부장 성낙경 (사)마을문화네트워크 이사장	15:00~15:40	40'
질의응답	참가자 질의응답	15:40~15:55	15'
3부		사회: 배운수 기획경영본부장	
폐회	기념 촬영 및 공지사항	15:55~16:00	5'



목차

발제

지역문화재단 역할전환시대 운영방향과 전략 • 4p

라도삼 |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광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재단의 상생 • 14p

공규현 | 인천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도시에 '생기'를 더하는 지역문화/재단 • 19p

고영직 | 문학평론가

토론

좌장 : 안영노 | 안녕소사이어티 대표

염신규 |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 32p

신정호 |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부장 • 35p

성낙경 | (사)마을문화네트워크 이사장 • 38p

스물, 2026년부터 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문화재단 역할전환시대 운영방향과 전략

발제

라도삼 |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평구 문화재단 문화정책포럼(2025.01.16.)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전환과 부평구 문화재단 운영방향

라도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화정책)

I. 시작에 앞서

1. 저는 지난해 7월부터 부평구문화재단의 요청을 받아 오늘 열리는 문화정책 포럼을 위해 몇 분과 반년 가까이 논의해 왔습니다. 포럼의 주제와 방식을 논의했고, 포럼의 개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각 본부의 사업과 고민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평과 부평문화재단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자 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여러 각도에서 논의했습니다.

2. 그러면서 저는 '어느 전문가가 나와 발제하는 포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문가가 나와 얘기하면 깔끔한 발제에 설득력 있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현재를 개선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길을 아는 것은 가는 것과는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여 저는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이 아닌, 재단 내 각 본부가 발제하고 전문가가 듣는 자리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 과정에서 본부를 중심으로 워크숍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로 오늘 이 포럼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워크숍과 오늘 포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모쪼록 오늘 자리가 부평구문화재단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3. 제가 오늘 의뢰받은 발제는 '설립된 지 스무 해가 되어 가는 부평구문화재단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어제 논의가 과거에서 현재에 대한 것이라면, 오늘은 현재에서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사회 환경의 변화와 부평구의 현실을 둘러싼 변화로부터 미래의 방향을 구하는 것이 오늘 발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평구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포럼의 개최 방향을 논의하며 부평구를 살펴봤던 사람으로서 재단이 요청한 바대로 사회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변화에 맞춰 부평구 문화재단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포괄적으로 논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논의는 구체성, 즉 맞춤형의 자문이 빠졌음을 미리 말해 둡니다. 다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예술과 문화정책이 급격히 전환되는 현실에서 재단이 나갈 방향이 무엇이여야 되는지만 논의하며 그 이상은 부평구문화재단에 맡기고자 합니다. 이제 스물의 청년이 되어가는 재단인 만큼 스스로 힘으로 잘 설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발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II. 재단이란 무엇인가?

4. 우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말씀드리면 재단은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 소유로 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것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구성된 법인"이라 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재산'입니다. 재단은 일정한 재산을 '공공적'-비영리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을 말합니다.

5. 이처럼 재단의 설립 목적은 '재산의 운용'입니다. 문화재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1972년 유신헌법 제정과 더불어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적립하며 이 기금의 운용을 위해 <한

국문화예술진흥원)이란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2005년 이 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됩니다.

6. 1997년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서울에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서울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할 당시 제가 세운 재단 설립의 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는 문화정책의 기본원리인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었고, 두 번째는 공공적인 재산의 관리 즉 기금관리였으며, 세 번째 문화정책에 필요한 전문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 유효하나 현실은 조금 다른 게 역사적 경험입니다.

7. 팔길이 원칙은 고전주의 경제학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들어선 케인즈 학파에 의해 제기된 개념입니다. 시장 상황 속에 예술을 방치(?)할 수 없기에 1940년대 영국은 예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을 설립하는데, 이때 임명된 초대 위원장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는 '팔길이 원칙'을 주창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정점으로 올라갈 당시 예술을 통한 선전선동의 위험을 감지하였기에 그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자'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8. 이에 영국은 위원회 형태로 예술기관을 설립합니다. 당사자인 예술가가 참여하여 정부에 흔들리지 않는 예술정책을 추진하도록 한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2005년 독립계였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위원회 형태로 바꿉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이은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터지며 위원회가, 재단의 형태로 만든 공공기관이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길이 원칙은 재단 하나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 예술지원 제도 전반을 살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9. 두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단의 기본개념인 공공적인 재산의 관리, 즉 기금의 관리입니다. 기금은 본래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던 제도입니다. 법은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관할 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가의 기금은 남기고 지방 규정만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이관됩니다. 하여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법률상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처리되어 운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법에는 재단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나, <경기문화재단>이 설립하며 기본재산으로 처분한 예를 남기며 <서울문화재단>을 포함하여 대부분 광역문화재단은 자신이 가진 기금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처분하여 관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표기되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11. 참으로 법 해석 자체가 영망이 되며 나온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금리'에 있습니다.

12. 알다시피 기금은, 그 기금의 운용을 바탕으로 한 수익에서 재원을 형성하여 사업을 합니다. 1990년대 경기 호황기 및 IMF로 인한 금리인상기 당시 예상했던 금리는 7~10%였습니다. 100억원을 맡기면 최소 7억원에서 10억원까지 나오는 구조, 그 결과 1,000억원을 조성하면 7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사업비가 확보되리라는 게 <경기문화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이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금리는 급속도로 내려갑니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 0%에 가깝게 우하향한 금리는 1조 원을 확보해도 사업비가 0(zero)인 상황을 만듭니다. 이에 (지방)정부는 이 기금을 쥔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기금을 소진하였고, 지방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을 헐었습니다. 그 결과 기금은 사라집니다. '일정한 목적으로 조성된 재산'을 공공적으로 관리·이용한다는 목적 자체가 소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단은 어떤 설립 목적 근거를 갖게 되는 걸까요? 두 번째 논리도 깨집니다.

13. 그럼 남는 것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역문화재단'이란 명칭에서 보듯, 지역의 문화를 관라운동하는데 있어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문화를 운동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지역을 모르고서, 문화의 전략과 운용의 전술을 모르고선 문화정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4.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정책의 특징입니다. 익히 알다시피 문화정책은 담당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를 기획하고 실행할 여러 주체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축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재단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축제를 기획하고, 각각의 프로그램을 만들며 여기에 참여할 여러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재단은 이를 확보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 자체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만, 누구를 모을 것이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단은 늘 자신이 지향하는 방향의 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할 어떤 주체들을 관라운동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거버너(governor)로서 여러 자원과 역량, 주체를 연결하며 이를 통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 역량이란 거버넌스 역량, 협업의 역량입니다.

15. 지역문화재단에서 이를 어떻게 펼쳤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제 각 지역문화재단이 어떻게 운용되고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I. 지역재단은 어떻게 발전해 왔나?

16.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광역문화재단이 맨 처음 설립된 것은 1997년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이후 1999년 <강원문화재단>이 설립되었고, 2000년 <제주문화재단>이 설립됩니다. 서울에 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은 2004년으로 <인천문화재단>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2009년까지 광역자치체의 문화재단은 더는 설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17. 경기, 서울, 인천 등 이른바 수도권 빅 3에는 기금이 있었습니다. 경기는 1천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자 했고, 서울은 370억 원 규모, 인천은 기금 100억 원에 새로운 조례 제정을 통해 전체 예산의 1%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단을 설립하여 기금을 운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자치체에는 기금이 없었습니다. 이에 재단을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9년부터 재단을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8. 2008년 2월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같은 해 9월, 새로운 예술정책 방향으로 「예술지원의 4원칙」을 발표합니다. '선택과 집중', '사후 지원', '간접 지원', '생활 속의 예술 향유' 등으로 구성된 해당 발표에 정부는 향후 예술(지원)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 간 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각 광역도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엔 부산, 대구, 전남, 대전 등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었고, 2010년에는 경남과 광주에, 2011년엔 충북에, 2015년에는 전북에, 2016년에는 세종과 울산 등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대부분 광역자치체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게 됩니다. 새롭게 지방으로 이전될 사업을 운영할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지요.

19. 기금과 예술지원 사업의 지방 이전 사업을 중심으로 설립한 광역자치체와 달리 기초자치체는 사정을 달리 합니다. 기초자치체는 무엇보다 단체장의 의지와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지역 내 문화시설 운영이라는 과제에 대응해 문화재단을 설립합니다.

20. 최초로 설립된 재단은 1998년 <강릉문화재단>입니다. 이는 강릉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게 아니라, 제일교포가 강릉시에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입니다. 하여 제대로 된 문화재단은 2001년 설립한 부천문화재단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부천문화재단은 일찍이 문화도시를 선언(1997)한 부천시가 설립

한 재단으로 지역문화 새로운 경계를 개척하며 (지역)문화정책 1세대를 이끕니다. 이들에 의해 지역문화 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1. 부평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은 2006년입니다. 기초문화재단으로서는 상당히 앞선 시점에 설립된 재단으로, 같은 해 설립된 재단은 전주문화재단, 충주중원문화재단, 하남문화재단 등입니다.

22. 이 재단들이 가진 설립 및 운영목적은 시설관리 및 지역 축제 등 문화사업을 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푸평역사박물관 중심의 사무국으로 운영되던 부평문화재단도 2010년 <부평아트센터>가 건립되며 이를 운영하는 것을 주업무로 삼습니다. 그만큼 시설운영 및 지역사업 주관이 주요한 업무였는데 여기에 큰 변화를 준 건 2004년 설립된 <성남문화재단>입니다.

23. 성남은 2단계-지금은 3단계-에 거친 이주민의 도시입니다. 1단계는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조성된 도시였고, 2단계는 분당, 3단계는 판교입니다. 2004년 설립된 <성남문화재단>은 이런 이주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민의 문화 활동과 예술 욕구를 자극하는 '성남 사랑방 클럽'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랑방 클럽'은 동아리 형태의 예술 활동으로 문화재단은 이들 주민에게 연습 및 발표공간을 지원하는 한편 공적 공간에서 발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활동의 동기를 제공합니다. 지금 「지역문화진흥법」 내 생활문화 사업을 탄생시킨 이 사업은 2009년 전국문화예술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문화부 장관상 수상하고, 2010년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그리고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전국적인 사업을 만든 것이지요.

24. 이후 사업은 서울로 확산됩니다. <성남문화재단>을 이끄신 이종덕 대표님이 <중구문화재단>으로 자리를 옮겨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마포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등에서 각 자치구 문화재단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며 기초문화재단은 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주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기초문화재단의 2단계 유형을 만든 것이지요.

25. 3단계 모델은 서울 성북구의 <성북문화재단>에서 나옵니다. 2012년 설립된 <성북문화재단>은 여느 기초문화재단과 같이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자치구 내 도서관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아리랑문화센터 등 여러 문화시설을 관리하는 게 설립목적이었지요. 그런데 이 재단에 대표로 취임한 김종희 대표가 재단의 지역사업을 추진하며 의사결정 체계를 주민에게 넘기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추진하게 됩니다. 주민참여 예산 등 거버넌스가 주요한 흐름을 형성했던 2010년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그는 이 체계를 '공유성북원탁회의'라 명합니다.

26. 성북은 이 시스템으로 여러 사업을 합니다. 그 결과 <성북문화재단>은 2016년 <세계지방정부연합회>가 주관하는 '국제문화상'을 수상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또 이 모델은 영등포구로 수출(?)되어 '공유영등포원탁회의'를 만듭니다. 기초문화재단의 새로운 운영모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27. 이후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점차 지역의 문화사업과 거버넌스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넓힙니다. 그 결과 거버넌스는 재단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합니다.

28. 기초문화재단이 다시 성장하게 된 것은 정부의 주도로 추진된 문화도시 사업 때문입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법제화된 문화도시는 2018년 추진 가이드라인(문체부, 문화도시 추진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제시되었던 문화도시 추진조건은 '별도의 전담추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문화도시 사업을 전담할 문화재단이나 센터를 설립하게 되고, 2018년부터 문화재단의 수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2023년에 나온 「2022 문화도시 성과(지역문화진흥원)를 보면, 2018년 71개였던 기초문화재단의 수는 117개로 급증하였습니다. 이게 문화도시 사업은 성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9. 문화도시 사업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지역을 기획하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주체의 발굴, 지역 콘텐츠 및 브랜드의 형성, 이를 위한 거버넌스 형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각 재단은 종합적인 목표 체계 하에 계획을 세우고 사업에 접근합니다. 과거 시설을 운영하고 축제를 관리·운영하는 주체에서 종합적인 지역문화 사업 주체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단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 할까요? 앞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을 목표로 어떤 사업을 해 나아가 할까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초문화재단의 발전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IV. 사회와 정책환경의 변화, 재단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현실은 무엇일까요?

30. 잘 나가던 기초문화재단은 2020년대 중반에 들어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외부로부터의 위기, 즉 정부가 추진하던 '문화도시 사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31. 사실 문화도시 사업은 설계 당시부터 2022년까지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이후 권역 간 문화도시 벨트를 구축하여 발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혹은 30개 정도 도시를 문화도시로 선정할 때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대로 하면 얼추 완성된 것 같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24개에 K-문화도시로 13개 도시가 지정되었으니 목표보다 많은 37개 도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입니다.

32. 그런데 문제는 문화도시 이후입니다. 부평도 해당되지만, 문화사업이 종료(5년간, 부평은 2021~2025)된 이후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를 지속할 어떤 규정도 없고, 문화도시로 부르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5년간 사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지역문화진흥법」이라 하면, 사업이 종료된 도시를 문화도시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 결과 여기저기서 비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업연장보다 종료에 가깝게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사업을 없애다 보니 여기저기서 나오는 불멘소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33. 문화도시 사업을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한 기초지자체는 더 합니다. 지난해(2024년) 추가로 예비도시를 선정하지 않음으로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문화도시는 추가로 지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문화도시를 대체할 새로운 지역사업이 발굴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문화재정은 줄고, 지방정부의 재정 또한 안 좋아집니다. 그럼 재단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34. 내부 문제 또한 큼니다. 성남사랑방 클럽은 이후 생활문화 사업을 만들었고, 공유성북원탁회의로 새로운 재단 모델을 만들었으나, 생활문화 사업도 거버넌스도 모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화도시와 더불어 모든 운영모델이 그 시효를 사라진 것입니다. 위기는 과거의 것이 사라지는데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재단은 점점 자신의 운영모델을 잃고 별 따를 모델이 없는 망망대해로 나가는 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재단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할까요?

35. 망망대해에 펼쳐진 재단은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기후 위기, 초고령화, 세대 분화, 양극화 등 우리 사회를 넘어 지구 환경 전반에 닥쳐온 변화는 심각한 위기는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합니다. 수도권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지역 소멸'은 이미 현실입니다. 이 엄중한 현실 앞에 지역마다 놀라운 생존꾼들이 등장하고, 갖가지 악당(villain)들이 날뛰는 것도 현실입니다.

36.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세지는 기후 위기와 재난 상황, 초고령사회로 나가는 엄연한 현실 앞에 도시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과거 용도를 나눠 지역별로 쓰던 방식은 사라집니다. 이제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각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파리(Paris)시 안 이달고 시장(Anne Hidalgo) 시장의 자문위원이었던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에 의해 제안돼 파리를 비롯해 여러 도시에 채택되고 있는 이 도시계획 방식은 '15분 도시'라 불리는 이른바 'n분 도시' 방식입니다. 이 계획은 각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요소를 분산배치하여 도보생활권 내에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시 또한

「2040 도시기본계획」(2022)에 보행생활권이란 개념으로 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37. 이로 인해 지역은 새롭게 강조됩니다. 과거 창조도시가 특별한 자원이 밀집된, 보헤미안이 선호하는 환경을 갖춘 도시를 지향했다면, 지금 강조되는 지역은 특정 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입니다. 과거 지역이 창조계급이 살기 편한 환경을 갖추는데 집중했다면 현재의 계획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합니다. 과거 창조도시론이 지역-도시 내 불균등 발전을 감안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면, 지금 강조되는 15분 도시는 지역 내 균형발전을 꾀하고, 용도의 융합을 추구합니다.

38. 이에 지역은 변화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일상 생활권 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점차 고령화돼 이동성이 떨어지는 사회, 사회적 활동이 점점 줄어들어 사회적 자존감보다 지역적 혹은 일상적 자존감이 더 필요한 사회, 기후 위기에 대응해 각종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생활 및 도시 여건이 필요한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중차대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재단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사업비는 줄고, 운영모델은 사라지는 현실에서 우리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미래 재단의 운영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V. 앞으로 나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39.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권 영역, 즉 자치구나 그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지역이 '연합한' 도시가 아닌, 행정적 필요성에 의해 '구획된' 도시인 현 지역체계 속에서 주민들은 지역보다는 도시정부, 도시보다는 중앙정부에 의존해 삽니다. 일상보다 정치가 우선하고, 지역문화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문화재단이 관심을 받고 일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40. 재단의 중장기발전 차원에서 지난해(2024)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2024~2028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에 따르면 부평구민 중 35.3%는 재단에 대해 모르고, 나머지 51.2%는 이용경험이 없으며, 오직 13.5%만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무려 78.3%의 구민이 모릅니다. 이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재단이,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이 얼마나 구민을 위해 애썼느냐란 의문이 따르지만, 지역과 지역문화재단이 주민들 사이에 존재감을 형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41.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상태를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42. 우선 제안을 드리면 재단의 언어가 쉬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언어로 다가갔으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언어는 매우 어렵습니다.

43. 부평구문화재단이 현재 내세운 비전은 "문화적 삶과 창조적 생태계를 함께 가꾸는 열린 소통광장"입니다. 쉽게 해석되나요? 언뜻 보면 '문화적 삶'은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뭘뜻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과는 배가 아닌 것'이라는 소쉬르(F. Saussure)의 말처럼 '문화적 삶'은 그것 아닌 삶과 비교되어야 하는데, 그걸 비교하는 순간 더 어렵습니다. 그럼 이진 무엇일까요?

44. '창조적 생태계'는 더 모르겠습니다. 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걸로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호합니다. 더구나 이를 '함께 가꾸어 간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하여 지금의 비전은 거의 수사(rhetoric)에 가깝습니다. 실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해주고, 함께 가자는 예기로 말하기엔 수긍되지 않는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구나 '건강한 문화생태계 구축 및 콘텐츠 발굴',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 문화 주도성 확보' 등 전략적 목표에 다가가면 거의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문화생태계란 무엇일까요? 주민 문화주도성은

어떻게 획득되는 걸까요?

45. 대부분은 문화재단 운영비전 및 (전략) 목표는 이런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인 시민이 아닌, 문화정책에 오래 몸담아 온 사람만이 아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현재 우리가 놓인 위치가 아닌, 문화정책에 상존하는 문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지역 문제보다 문화정책 일 반에 제기되는 현재의 문제를 반영한 측면이 강합니다.

46. 따라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문화정책계의 현실 및 의제가 아닌, 지역의 현실과 입장으로 운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역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살피는 자세에서 재단의 비전 과 목표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7. 저는 부평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문회의 몇 번 참석한 외지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여 부평구문화재단의 비전을 정하는 건, 전략적 목표나 방향을 정하는 건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하여 조금은 보편적인 범위에서 앞으로 운영방향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걸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발제자에게 구할 것이 아니라, 재단 스스로 부평구 분들과 관계하여 얻어낼 답입니다.

48.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 부평구에 대한 연구입니다. 부평이 무슨 도시인지, 어떤 특성과 문화(성)을 갖고 있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화도시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49.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화장실 문화'와 '문화 화장실' 사이에 써 있는 문화의 개념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명 중 99분은 다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의 문화와 뒤의 문화는 다릅니다. 앞은 상태를 말하고, 뒤는 방향을 말합니다. 상태는 분명하나 방향은 모호합니다. 하여 문화는 뒤에 쓰는 게 편합니다.

50. 부평구 문화는 부평구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하여 부평구의 문화를 알아야 '문화 부평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간혹 '부평구의 문화'를 모른 채 '문화 부평구'를 얘기합니다. 현실은 모른 채 일반적 관점에서 문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부평구의 문화와 현실입니다.

51. 부평구의 문화 또한 하나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 지역을 미분해야 합니다. 각 동단위로, 그보다 작은 단위로, 각 집단으로 나누고 지역으로 나눠 문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보다는 MZ세대 문화가 분명하고, MZ보다 Z세대의 문화가 분명합니다. 그것처럼 부평구 문화보다 백운역 앞의 문화가 더 확실히 다가오고, 어떠한 아파트 단지나 동의 문화가 더 쉽게 다가옵니다. 것처럼 세분하여 문화를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정확한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적분하여 부평구의 문화를 구해야 합니다.

52. 형식적입니다. 각 연구는 지역의 인구 특성과 산업구조, 재정 상태 등을 공부하지만, 그 지역의 문화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설문으로 들어가거나 현재의 비전을 말하고 새로운 비전을 구합니다. 트렌드가 중요하지 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현재의 문화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극도로 미분하는 전략과 다시금 적분하는 전략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부평구의 문화를 획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53. 자 (현재의) 문화를 구했으면, 이제 앞으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건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그저 주어지는 문화처럼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4. 앞서 말한 것처럼 문화는 뒤에 쓰면 편합니다. 그것처럼 방향 또한 문화를 뒤에 쓰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냥 문화도시가 아니라 그 방향을 표시하는 언어로, 예컨대 역사문화도시, 예술문화도시, 생활문화도

시, 보행문화도시 등 방향을 앞에 놓고 쓰면 문화는 분명 방향을 나타냅니다.

55. 부평이 내세운 것은 '음악문화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 명확한 방향을 내세운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평에 적절한 언어였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부평은 어떤 면까지 보고 생각한 비전인지, 또 어떤 합의과정을 거쳤고 그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했는지 등 여러모로 살펴볼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문화도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려 80%에 가까운 구민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6. 그렇기에 저는 세 번째 의제로 거버넌스를 제시합니다. 앞의 재단의 설립 배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문화 형성과 구성의 거버너로서 제 구실을 해야 한다는 사실. 그러나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57.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연구는 '공동연구'입니다. 내 책상이 아니라 타인의 책상을 봐야 한다는 것,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고 받아주며 그가 스스로 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58. 그런데 기초문화재단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일을 해야 합니다. 행정과 주민, 예술을 묶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인용한 「2024~2028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의 직원 FGI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응답자가 조직 내 소통과 융합을 과제로 제시하며 조직문화 혁신을 얘기합니다.

59. 내부도 쉽지 않지만, 외부는 더 어렵습니다. 예컨대 음악문화도시를 하려면 음악 콘텐츠를 양성하는 일부부터 음악가의 성장을 도모하는 일, 음악문화 도시임을 느낄 수 있는 도시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역량과 예술가의 역량, 주민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단은 부평구의 행정체계에서 외부 기관일 뿐입니다. 집행부를 움직이기에 어려운 조직입니다. 하여 시장의 비전이 되고, 시장이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기초문화재단은 어려운 일과 과정,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VI. 마지막으로 나가며

60. 기초문화재단의 최대 장점은 '자산'입니다. 여러 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만큼 큰 장점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답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61. '자산'에 비해 가장 큰 약점은 '시각'입니다. '시각'은 직원들이 나태하고 무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거리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관점의 전환, 정책의 원칙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즉 현장 속에서 자주 입장을 바꾸고 정책을 하다보면 '시각'이 흔들리는 일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가끔 정부는 광역에, 광역은 기초에 '거기는 수준이 안 돼서 일을 못한다'라는 불평이 나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수준이 되냐고.

62. 책상 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저도 때론 마음 놓고 편하게(sic!) 일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장에서의 변화와 요구입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63. 저는 모든 가정을 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성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예술을 지원하고, 생활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축제를 관리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 일하는지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화정책이 주는 관성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64. 다른 어떤 정책과 달리 문화정책은 관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크게 질문하지 않고, 누군가 하면 따라 합니다. 이것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지보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술지원을 왜 해야 하는지, 축제는 왜 개최해야 하는지, 문화재단이 왜 시설을 운영·관리해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해 왔기에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꾸준히 묻고 그 질문에 답하며 일했으면 합니다.

65.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다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평구에 맞는 일을 찾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일보다 작은 일, 일상적인 것, 지금 해봐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면 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부평구문화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평구의 현실을 바꾸고, 부평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재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6. 다른 어떤 구도 부평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평구문화재단 또한 유일합니다. 그 유일함으로, 유일한 모델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제 스무 살, 그럴 나이도 되었습니다. 그 어떤 관성으로부터도 벗어나 나를 의심하며, 이유를 찾아가며 일하는 것, 그것이 부평구문화재단이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다시금 스물 이후 미래를 이끌어 갈 부평구문화재단의 파이팅과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며 이만 발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의 20주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상생 관점에서

공규현(인천문화재단 경영본부장)

0. 들어가기 - 부평구문화재단의 위상

인천에는 1개의 광역문화재단과 5개의 기초문화재단이 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기초문화재단 설립 비율은 서울이 88.0%, 대구 87.5%, 강원 83.3%, 경기 71.0%, 인천과 경남이 50.0%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인천의 기초문화재단 중에서는 가장 먼저 설립(2006.12.4.)되었고, 전국 119개 기초문화재단 중에서 설립일 순으로 13번째에 해당하여 비교적 초기에 설립된 편에 속한다. 서울 자치구 문화재단은 모두 독립적인 문화재단 설립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나, 인천은 서구를 제외한 4개의 기초문화재단은 자치구 지역문화진흥조례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표 1] 기관별 설립 근거 조례

기관명	설립연도	기관 설립 조례(독립)	자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인천문화재단	2004년	○	-
부평구문화재단	2006년	-	○
인천서구문화재단	2017년	○	-
연수문화재단	2019년	-	○
인천중구문화재단	2021년	-	○
남동문화재단	2022년	-	○

[표 2] 지역별 광역문화재단 및 기초문화재단 수
(출처 :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No.	지역	광역 문화재단	기초자치단체				기초문화재단	
			시	군	구	합계	개수	설립비율
1	서울특별시	1	0	0	25	25	22	88.0%
2	부산광역시	1	0	1	15	16	2	12.5%
3	대구광역시	1	0	1	7	8	7	87.5%
4	인천광역시	1	0	2	8	10	5	50.0%
5	광주광역시	1	0	0	5	5	1	20.0%
6	대전광역시	1	0	0	5	5	1	20.0%
7	울산광역시	1	0	1	4	5	2	40.0%
8	세종특별자치시	1	0	0	0	0	0	0.0%
9	경기도	1	28	3	0	31	22	71.0%
10	강원특별자치도	1	7	11	0	18	15	83.3%
11	충청북도	1	3	8	0	11	4	36.4%
12	충청남도	1	8	7	0	15	7	46.7%
13	전북특별자치도	1	6	8	0	14	6	42.9%
14	전라남도	1	5	17	0	22	6	27.3%
15	경상북도	1	10	13	0	23	10	43.5%
16	경상남도	1	8	10	0	18	9	50.0%
17	제주특별자치도	1	0	0	0	0	0	0.0%
	합계	17	75	82	69	226	119	52.7%

부평구문화재단의 20주년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에서도 재정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광역과 기초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예산 확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지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 - 인천시 및 인천문화재단 사업과의 연계

부평구문화재단은 2016년부터 문화특화지역조성 공모사업을 수행(5년간)했고, 2020년에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 법정 문화도시 문화도시 사업을 5년간 수행²⁾하여 2025년에 마지막 해를 맞게 된다. 문제는 법정 문화도시사업 종료 이후에, 이와 동등한 사업과 인력을 유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실패한다면, 사업 축소와 더불어 조직과 인력도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3] 부평구문화재단 연도별 인력현황 및 예산규모
(예산규모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2024-2028 부평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p.149)
인력현황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

연도	인력현황(명)	예산규모(억원)	비고
2015년	30명	95.7	
2016년	43명	101.0	
2017년	119명	120.9	BP음악산업센터 개관
2018년	134명	133.1	
2019년	136명	138.9	「문화도시 지정사업」 예비도시 선정
2020년	138명	158.3	
2021년	128명	151.2	법정 문화도시 지정
2022년	136명	184.7	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 위.수탁 계약 체결
2023년	147명	211.2	
2024년	153명	201.8	

부평구청은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으므로, 문화도시사업 종료 후에 이와 동등한 예산을 전액 출연금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 153쪽에서도 법정 문화도시사업과 부평상권르네상스사업 종료 이후를 우려하고 있으며, 타개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부평구청의 출연금 규모를 정액으로 고정하는 방안은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넘어서는 부분이라 힘들어 보인다. 이외에 민간 기부 후원 확대나 지역문화기금 확충도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비 지원을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1) 2015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 대상 도시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5년간 총 37억5천만 원을 투입,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
(출처 : 2015.5.4. 부평구청 보도자료, 「부평구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2) 2019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서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됨.
(출처 : 2019.12.30. 부평구청 보도자료, 「부평구, '역사를 담고 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 발판 마련」)

3) 2021년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서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됨.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통해 부평구는 향후 5년간 국비를 포함한 총 1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2025년까지 5년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발표함.
(출처 : 2021.1.7. 부평구청 보도자료, 「부평구, 지역민의 문화 정체성 구축하는 문화도시로 거듭난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문화도시 핵심사업 중에서 인천시 재정 지원을 추진해 볼 수 있다. 공간지원사업인 '부평별곳' 사업은 인천시 위탁사업으로 인천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특화거리사업 정정점과 연계하고, 음악축제인 뮤직플로우페스티벌은 인천시의 축제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밖에도 예술교육사업과 시민문화기획사업은 2024년에도 인천문화재단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두 가지 사업의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부평아트센터 운영 - 위탁사업의 출연사업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지자체의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은 대부분 지자체의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위탁사업비는 사업을 수탁하는 주체가 변경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재원 확보 측면이나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재정확보방안으로 보기 힘들다.

인천문화재단은 2008년에 최초 위탁을 맡은 인천아트플랫폼 운영을 재단 정관의 목적사업에 명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년간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한계로 인해, 2023년 말에 레지던시 페지 등의 문제로 수탁사업 주체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문화재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2025년에는 예산비목을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의 주력사업인 부평아트센터의 경우에도 2010년에 개관한 이래 15년이 되는 현재까지 위탁사업으로 남아 있으므로, 부평아트센터 운영을 부평구문화재단 사업에 추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부평아트센터 운영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위탁사업 운영기간이 오래된 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전문인력 양성 및 아카이브 운영 - 인천문화재단과 협력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본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부평구문화재단은 위탁시설과 문화도시사업이 많은 것에 비해 정책연구 및 홍보 인력이나 아카이브 축적 등 재단 경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재단의 역사를 축적할 아카이브 사업 예산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천문화재단은 2022년에 인천 지역문화재단 협력회의를 발족하여 지역 기초문화재단과 협력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부평구문화재단도 기관 내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경영 및 아카이브 사업 등에 있어서는 인천문화재단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예술교육 및 시민문화기획사업에 있어서도 인천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4] 2024년 인천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지역문화재단 협력사업

No.	사업명	사업내용
1	직원연수프로그램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2024년에는 일본에 다녀옴)
2	인천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문화예술자료 수집·등록 및 시민 대상 서비스 시스템 구축 (6개 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구축중)
3	협력형 시민문화기획사업	5개 문화재단에 시민문화기획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2개 문화재단(서구·부평구)의 예술교육지원사업에 예산 지원
5	언론홍보네트워크	언론홍보에 필요한 스크랩 서비스를 인천문화재단 예산으로 가입하여 인천 지역문화재단의 기사 수집 및 각 재단에 제공
6	ESG 캠페인	인천 지역문화재단이 공동으로 ESG캠페인 시행

4. 결론 - 설립목적에 충실한 부평구문화재단으로 돌아가기

2024년은 5년의 사업기간이 종료된 1차 법정문화도시들이 출구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한 한 해였다. 2차 법정문화도시인 부평구문화재단 또한 2025년 사업종료시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문화도시 지정은 마중물 사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졌던 것만큼, 마무리로서의 출구전략이 아니라 지역 현황에 맞춘 지속가능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5년간의 법정문화도시 사업 이후에 부평구문화재단의 미래비전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면, 결국 부평구문화재단의 최초 설립 취지로 돌아가서 기초문화재단으로서 사업의 기본적인 뼈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문화도시 부평’의 매력은 결국 시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예술성, 시민성, 지역성 이 세 가지의 키워드는 광역이나 기초를 따지지 않고 모든 문화재단이 고민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일 것이다. 법정 문화도시라는 거창한 네이밍을 벗어버린 이후 부평에 남은 예술인은 얼마나 되는지(예술성), 부평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은 무엇인지(시민성), 그리고 부평만이 가진 매력으로 발굴한 것은 무엇인지(지역성) 신중하게 돌아보고, 문화도시사업으로 수행했던 수많은 사업 중 이 세 가지의 키워드에 맞는 핵심적인 사업을 살려서 부평구문화재단의 미래로 연결하는 작업을 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

인천 부평구문화재단 [부평문화포럼]
 도시에 '생기'를 더하는 지역문화/재단
 _ 지역은 당신의 캔버스가 아니다

2025. 1. 16(목) 14:00, 부평구아트센터 2층 호박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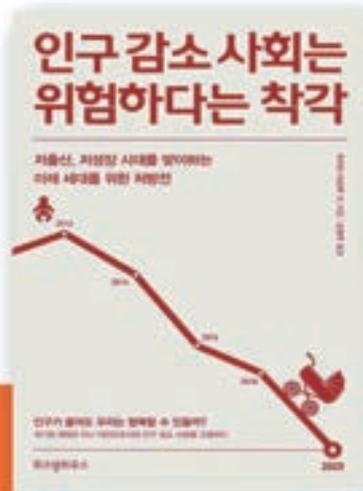
고영직 | 문학평론가, 前 경희대 실천교육센터 운영위원

'생기'가 없는 집은 사물(死物)이 되어버린다

일본의 사상가 우치다 다쓰루는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처방전'이라는 부제를 단 『**연구감소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2018)에서 **'생기'가 없는 집은 '사물(死物)'이 되어버린다**는 비유를 들어 파국적 사태를 외면하려는 일본 엘리트의 사고방식은 소위 태평양전쟁 지도부와 거의 다르지 않다고 비판한다. '자신의 의견은 의견, 논의는 논의'(아루야마 마사오)라는 일본인 특유의 행동지침에 따라 '근거 없는 낙관론'에 매달려 이상행복감에 가까운 망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치다 다쓰루는 일본 사회의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및 '공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전국지(全國紙)의 소설 현실과 텔레비전의 공동화**라는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낸다. "전국지의 소설은 일본 사회의 국민 간 의사소통과 합의 형성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37쪽)라든가, "텔레비전의 공동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서 검토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공인이 가까워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39쪽)라는 진술이 그러하다. 그러면서 **인간이 그 안에서 '생기'를 공급하는 체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인간적인 심숙을 요구하는 체계, 주변 사람들이 참가자를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 표현하면 것이 체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체계, 이것이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젊은 여성에게 인기가 없는 자치단체는 사라진다”



“결혼이나 출산 또는 집을 지을 때, 젊은 부부는 어디에 살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한다. 당연히 그들과 그녀들은 **아이를 키르기 좋은 환경**을 고를 것이다. 혼슈 오키야마현 나기초 마을은 고등학교까지 의료비 무상 지원을 비롯해 육아지원의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나기초 마을에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특수출생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나기초 마을의 육아지원은 딱히 중점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른 마을이 하고 있는 좋은 일은 최고 수준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마을의 방침이라고 한다. 그 결과 출산축자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

->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국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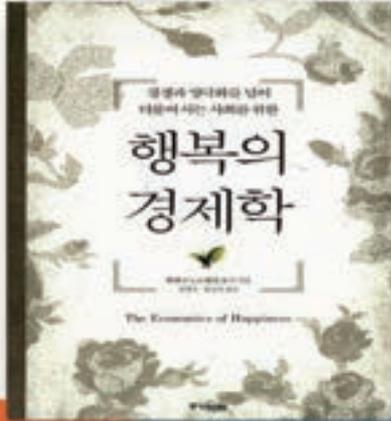
‘로컬 지향’의 문화예술 활동, 고려할 점들

“요즘에는 소비를 말할 때 물질보다는 ‘연결’ ‘경험’ 등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시한다.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 자체도 크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지역을 찾아가는 로컬 지향이라는 추세를 보는 듯하다.” _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교수 마쓰나가 게이코

- 얼굴이 보이는 소비가 뜬다: 인구 감소 시대에 중요한 것은 목적지향적 계획이 아니라, **유연하게 개인의 내면적 변화를 파악하고 그것을 사회의 변화와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 소비 형태: 물질에서 ‘일’이나 ‘관계’로: es)로컬스티치 (Local stitch)

행복의 경제학은 '로컬'을 재인식하는 것: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a) 1970년대 중반 라다크 청년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을 보여달라"

"여기에는 그런 집이 없어요"

b) 10년 후 라다크 청년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해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요" - 구걸하는 청년

→ 자기 문화에 대한 일등감과 자기혐오의 감정

정치학자 이관후, '정치'의 소멸이 대한민국 소멸 앞당긴다



'더 나은 나라, 더 좋은 사회'는 누가 대신 만들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스스로 소멸하는 대한민국을 멈추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정치가 만연해서가 아니라 정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정치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 그 자체입니다.

극단적 권력 투쟁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 진보와 건전한 보수가 경쟁·협력하는 정치, 포퓰리즘과 팬덤을 넘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정치, 갈등을 드러내고 조정하고 화해시키는 정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놓고 숙고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소멸을 막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安寧)’과 ‘미안(未安)’ 사이에서 _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안녕한 커뮤니티’를 만들자



“요즘은 다정, 다정함에 대해 자주 생각해요.”

_ 라명희 소설 <다정의 순간> 중에서

- 작품 속 도서관은 일종의 **샹크루어리(sanctuary, 피난처)**

-> **“이야기하기와 귀 기울여 듣기는 상호 의존적이다. 이야기 공동체는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철학자 한병철)

=> 특히 외로움은 **타자의 상실, 자아의 상실, 세계의 상실을 연속적으로 동반하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1951)에서 “전체주의는 외로워진 대중의 지지로 유지된다”라고 경고한 것도 그런 이유이다. (고영직)

지역문화재단, ‘지렁이-되기’를 실천하자

- * 서울시 및 인천시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역량 높지 않음.
 - * 인천시의 경우, 서울시 <N개의서울> 같은 기초자치구지원사업 부재.
 - * **부평구문화원 <부니.파.와 함께 문화로 동행>**-지역과 세대를 잇는 노년문화예술기획단 운영
 - * **마분리공동체-지역 재생사업 및 지역 커뮤니티 활동 활발함. 2023년 풍다란 <우리마을영화사> 운영**
- => **자치구문화재단의 태도와 역할: 지렁이 되기를 실천하는 것.**

“내 삶의 근간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하려면 **‘문체(文體)가 달라져야 한다’**고 느꼈다. 요즘 후배들에게 많이 배운다. 플러스마이너스1도씩 유다원 대표가 어느 세미나에서 지역 기획자로서 3년 동안 맨땅에 헤딩하며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 **토양(soil)을 바꾸는 ‘지렁이 되기’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더라. 편가 사실 가독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 필요에 의해서, 욕망이 차올라서, 사실 가독한 기획이나 활동을 해야 하고, 쓰고 싶은 글을 쓸 때 좀 더 쉽게 쓰려고 노력하고, 좀 더 설득력 있는 언어를 던지려고 한다. 이런 태도가 토착적 실패도 이어질 것 같다. 시선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며, 태도가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___ 고영직 <아르케365> (<https://ame365.kr/?p=84154>)

지역에 대해 **'금지(矜持)'**를 갖게 하는 문화/예술 활동 필요
 _ 아이가 자란다, **마분리공동체** 품에서



- 2023년 인천문화재단 꿈다락 <우리마을영화사>
 - 부개동, 일신동 주민 인터뷰+옛 조병창 기찻길, 일신시장, 마분공원 등 로케이션 촬영 및 제작발표회(비공개용)
 - 오래전 말무덤[馬墳] 있던 동네여서 '마분리'라는 지명이 아직 도시화석(化石)으로 남아 있음
 - 동네 아지트: 아이들 주도 '프로듀서형' 프로그램
 - 국토부 도시재생 위한 주민조직 사업으로 출발. 지역 내 주민들의 신뢰가 매우 높음. 토박이 비중 높음
 - 주민들 간 **우애로운 마주침**이 이루어지는 장소

'지역'을 기반으로 **'관계의 평상'**을 놓는 문화적 활동들
 _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젝트(PROJECT)'**를 해야 한다



광주 북구문화의집·전남 구례 지리산씨협동조합·전북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가 공동주최한 포럼 (2021.9)에서 **읍-면-동이라는 지역의 가장자리에서 '평상'을 놓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실감했다. 광주 북구 양산동 옛 양산시장 골목에서 마음놀이 터를 운영하는 김옥진 대표가 골목 어귀에 주차공간 대신 '평상'을 놓았더니 주민들과의 관계가 살아났다고 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관계의 평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환기한다.

부평문화재단, 로컬을 상상하는 문화기획을 하자

=> 문화 향유 중심의 활동, 장르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게 노동, 복지, 교육, 보육, 주거가 함께 작동하는 동네를 상상하고 구축하려는 일이 필요할 수 있다.

- '각자도생'이 권장되는 사회는 '각자 고생'하는 사회일 뿐이다.

-> '책읽기'와 연결되고, '살의 전환'과 이어져야 하며, '사람'이 남아야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들

_ 서울 공유성북원탁회의(공탁): 2020년 현재 300명 활동가



"그저 지역의 이웃들,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공론장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공탁의 시작이었다. (중략) 초기 제안자들이 아는 사람을 모임에 초대했고, 초대된 사람들은 그 다음 모임에 또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을 초대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개방), 반갑게 맞이해 주며(환대), 참여 이후에는 스스로 활동한다(자유) 정도의 암묵적 신뢰만이 존재했을 뿐, 어떠한 기준도 제한도 원칙도 없었다."

_ 이원재, <마을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중에서

(문화)돌봄 민주주의를 위한 '동네지식인'들의 커넥터 역할



우리는 상호취약성과 상호연결성을 생각하며 '상호의존의 정치학'을 구현해야 한다. 영국 '돌봄집단'이 쓴 『돌봄 선언』에서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3장 '돌보는 공동체' 편이다. 이들은 돌보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네 가지 핵심 특성, 즉 상호지원, 공공 공간, 공유자원, 지역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꼽는다. "돌봄과 복지활동의 민영화를 수반하는 아웃소싱이 아니라 지역 내부에서의 확대와 '인소싱'을 통해 공공 부문을 개혁해야 한다"(91쪽)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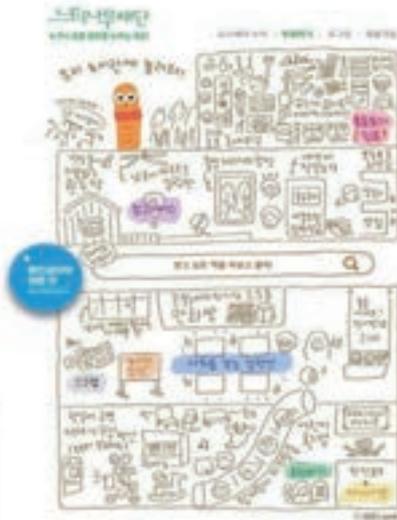
사회적 연결 강화를 위해 문화를 통한 '예방적 사회정책'

OECD: 2021년 이탈리아 G20 보고서

- 사회적 연결 등 사회적자본 강화에 핵심적 역할
-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에 대한 긍정적 역할 ⇒ 지역에 스며들게 하는 것 중요
- 웰빙과 질병 예방 등 건강에 긍정적 역할

⇒ "경청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서사적 우정'이 조금씩 생겼다고 해야 할까. 서사적 우정이란 다른 말로 하면 '이야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철학자가 "친구함과 경청이 없으면 공동체도 형성되지 않는다"(한병철)고 한 말은 그런 뜻일 것이다." (고영진, <사회의 공기>를 바꾸는 소중한 목소리, 한겨레, 2024.4.22)

용인 느티나무도서관, '로컬 커넥터'로서의 역할



2000년에 개관하여 용인 '리빙랩 네트워크'가 된 느티나무도서관(neutinamu.org)은 도서관이라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공공성'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과 여러 영역의 지역 단체들과 함께하며 '꼭두유는 공공성' '불러일으키는 공공성'을 추구했으며, 지금은 '시민의 연구실'로 변신했다.

스무 해 넘게 가르치지 않아서 큰 배움터가 된 느티나무도서관의 활동은 지역 활동의 롤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 <결혼하지 않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 <변이웃, 소진과 베품 사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인간과 비인간 동물, 유대의 배신> 같은 다양한 컬렉션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말을 거는 역할을 하며, 이웃들의 작당 모의와 실험을 북돋우는 커먼즈(common)로 변신했다.

용인 느티나무도서관, '로컬 커넥터'로서의 역할



이 모든 과정이 협업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졌다. 전철역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이 깃들인 살터 곳곳에서 컬렉션을 진행했다. 이러한 느티나무도서관의 활동은 누구나 품플 권리를 존중하며 지역 속으로 스며드는 과정이었다. 다시 말해 도서관이 건물이나 시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 일상의 삶 속으로 깊이 파묻히는 과정이었다.

춘천문화재단 <도시가살롱> 프로젝트: “공간이 없으면 영혼이 담기지 않는다”



농촌에는 공적공간이라고 해봤자 마을회관, 보건소가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자유롭게 주재성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농촌에 필요한 것은 큰 금액을 들여서 짓는 도농교류센터가 아니라, 농촌의 삶을 느낄 수 있고, 사람과 교감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골하루와 같은 농촌 커뮤니티가,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시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병준 | '도시가 살롱' 참여 주인공)

-> **공간이 없으면 영혼이 잘 담기지 않는다.** 소도시의 다양한 문화공간들이 한 도시의 무늬를 만든다. 그런 문화다양성이 살아 있는 도시 공간이 있는 한, '터무늬'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점이 되는 사람의 모여 선을 만들어 관계를 맺고, 이 선이 모여 면이 만들어지면 네트워킹이 된다."**(임완수) 도시가 흥어내는 매력은 그런 주인공들과 그 공간을 아끼고 입금하며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라. (고영직)

로컬의 공기를 바꾸려는 도시 편집자를 기르자



모두를 위한 도시는 가능한가. 낯선 외지인에게 자유롭고 개방적인 마을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편대하는 마음이 편대하는 마을(도시)을 만든다.** 지역의 지속성을 위해 도시 편집자들의 진화가 필요하다. 지역 혹은 동네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기록하고 재미있는 기획들을 수행하며 일상적으로 가벼운 교류들을 실현하는 모더레이터들을 키워야 한다. 특히 '재미'와 '장난'의 요소가 중요하다.

'그대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세계감(世界感)의 감각을 더 강화하고, 타자에 대한 문화다양성을 내재화하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자기 진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역미'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고,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여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말해야 하는 도시 편집자를 기르자

“**낯선 이와**의 관계가 곧 **미래와의 관계이다**”

앤디 워홀(Andy Warhol, 세례명 테오필, 1928년 1월 15일 - 1987년 2월 25일)은 미국의 예술가이다. 그는 상업 미술, 판화, 사진, 조각, 디자인, 조각, 퍼포먼스, 비디오, 그리고 대중 문화의 많은 다른 분야에 걸쳐 작업했다. 그는 대중 문화의 아이콘을 만들어 내었고, 그의 작업은 현대 미술의 경계를 넓혔다. 그는 또한 대중 문화의 아이콘을 만들어 내었고, 그의 작업은 현대 미술의 경계를 넓혔다. 그는 또한 대중 문화의 아이콘을 만들어 내었고, 그의 작업은 현대 미술의 경계를 넓혔다.

어느 시인이 쓴 산문집을 보다 **“입고픈 사람이 귀고픈 사람을 만나는 순간”**(오은, 『다독임』, 난다)이라는 구절에 눈길이 오래 머물렀다. ‘입고프다’는 “자유롭고 숨김없이 말을 하고 싶다”는 뜻이고, ‘귀고프다’는 “실컷 듣고 싶다”는 우리말입니다. 그런 만남이 바로 우애로운 마주침의 순간이고, 환대와 들봄이 단박에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여름, 당신의 귀와 입 또한 누군가의 소리에 더 민감해졌으면 합니다.

고영직, 순천문화재단 <po> 2021년 여름호 ‘에디토리얼’

어떻게, 기초문화재단은 지역의 ‘**공기**’를 바꿀 것인가?

관성을 벗어나는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엄신규_(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우선 라도삼 박사님의 일목요연한 발제문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전환과 부평구 문화재단 운영방향”의 주요한 방향에 상당부분 공감한다는 것을 진재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부평구문화재단의 중장기 발전 연구를 하면서 부딪혔던 고민의 지점들과 상당부분 맞닿아 있으며 우리 연구진이 끝내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자율지향 공공문화기관에 쌓여온 딜레마

발제문의 4~15번까지 한국에서 지역문화재단을 포함한 소위 민간자율형 공공문화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딜레마와 고민을 잘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발제자가 지적하신대로 “팔길이 원칙” 등의 자율적 문화정책(예술지원을 포함한), 기금관리, 문화정책의 전문성이 이런 민간자율형 공공문화기관들이 설립된 근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당시에 비슷한 논거를 대며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다녔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여년 시간 동안의 경과를 보면 그 당시의 낙관적 예측들이 무색해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점들이 어떤 이유로 난맥상에 빠졌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따져보면 우선 자율적 문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짜여졌는가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분명 문화기본법을 기반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 등의 개별적 제도 장치들이 존재합니다만 문화관련 법제도 외에 일반적인 공공기관, 기금을 다루고 있는 법·제도 체계와의 관계에서 과연 그런 문화관련 법체계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었는가를 돌아보면 늘 기이한 상황과 만났던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되는데, 법적으로 안 되거나”, “법적으로 안 되는데 법적으로 되는” 문제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뭔가 제도적으로 막힐 때 입법활동으로 그걸 타개하려고 하는 경향이 꽤 남아있는데 그것으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법제도와 법제도 간의 관계, 나아가서는 국가가 운영되는 원리 자체에 대해서 숙고하며 접근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민주공화국이란 헌법적 원칙 하에서의 유효한 공공문화기관의 운영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약간 오버해서 나아가면 공공영역의 민주성을 가로막고 있는 이중적 억압구조, 전통 관료질서에 의한 관행과 신공공관리행정으로의 재편 이후의 성과주의 측면의 억압이 “근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문화행정에만 국한되는 요소는 아니고 단시일 내에 해결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속제로 넘길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도 해봅니다.

지역문화의 시대? 문화재단의 위기?

발제자께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진정한 쓸모에 대한 매우 목적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저 역시도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지역이란 것 자체가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재단해서 얘기하지 힘들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에 놓여있습니다. 문제의 원인도 다르고 그러다보니 그 징후도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엄청나게 지역의 지형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문화정책에서 90년대 초반부터 써온 “지역문화”라는 개념을 이제 폐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부분 수정해서 정책을 설계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지역문화라는 담론이, 최소한 정책영역에서 본격화되었던 1990년대 후반의 논의를 다시 읽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크게 두 경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경향을 다소 거칠게 표현하자면 한 가지는 지역문화를 정체성으로 바라보며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었고 또 다른 경향은 콘텐츠로 바라보며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체로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막상 지역문화현장으로 돌아가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반세기 전에 상상되었던 지역문화관점에 해당하는 지역문화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발제자가 지적했던 지역 소멸이 그걸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용어도 일정하게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은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떠나서 지역을 떠받치고 굴러가게 만드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은 생산구조에서의 자립성이 극히 떨어지고 있고 도시형태가 서울-수도권의 구도시-신도시 구조를 답습하며 반복 재생산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문화의 유니크함이나 오리지널리티를 얘기할 수 있는 생산성이 사라지는 게 당연한 노릇이죠. 2000년대 초반 내내 문화정책에서 지역문화를 강조했고, 문화도시나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버전의 정책 사업을 했음에도 이런 상황은 오히려 점점 더 강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문화정책의 실패나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정책 이전에 산업적 생산을 중심으로 한 사회구조가 지역에서 훨씬 강력하게 작동했고 문화정책이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란 게 솔직한 판단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제도적으로 불충분한 기반과 시스템을 갖고 있는 문화재단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기는 매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지형을 바꾸고자 출발했던 문화재단이 얼마 안 있어서 무력감에 빠지거나, 외무내환에 빠지거나,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변화하는 것은 문화재단 내부 구성원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의 방식이 그 이상은 없었다는 것을, 이제는 자인할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변화의 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너무 먼 곳의 얘기보다 부평의 얘기로 돌아와서, “모든 관성과 가정을 거부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견해에 매우 공감합니다. 기존에 해온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의 이유, “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의 경우 많은 기관/시설을 갖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위탁해서 진행해왔지만 그런 일들이 결정되어가는 과정에서의 논의구조가 정책적 일관성이나 공감, 합의가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문화재단이라는 한 조직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정체성이나 공감대 형성이 이뤄질 수 없는 측면이 존재했다는 것이 제가 반년 이상 문화재단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화재단의 모든 사업을 다시 고민하고 셋팅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화재단의 정책-거버넌스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처럼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직은 자칫 재단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만들기 힘들어집니다. 서로 당장에 떨어진 일을 처리하기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 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조망한다는 것은 요원한 노릇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재단이 하는 일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정리하고 관련된 다른 누군가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사업담당자가 직접 한다면 더욱 이상적이지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군더더기처럼 보이더라도 홍보-아카이빙-정책-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규모가 작더라도 “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근거한, 문화재단과 부평 시민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민 그룹이 꼭 어떤 대표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몇 사람이더라도 부평구 시민의 문화적 행위와 연결된 사업을 단계적으로 설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부평구문화재단은 문화도시사업을 통해 상당한 행위자 그룹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을, 예산을 작게 쓰더라도 상당히 총총하게 설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사업과의 연계성 속에서도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단의 정체성과 비전을 스스로의 언어로 만드는 작업을 시도했으면 합니다. 발제자가 지적하셨듯이 연구팀이 제안한 비전은 사실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실상은 “남의 말”에 가깝습니다. 연구팀 능력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외부자들이 만들 수 있는 말은 사실 거기까지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조만간 20주년을 맞는데 이번 기회가 부평구 시민들과, 재단의 구성원들의 언어로 된 재단의 방향, 비전을 분명히 할 기회일 겁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협력과 체계화의 필요성

-신정호(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장)

공규현 본부장님이 제안한 사항들 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의 사업들과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추가 논의도 중요하지만, 기초문화재단에서 입장에서 광역과 기초 간 협력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하여 몇 가지 추가 제안해 봅니다.

□ 분명히 노력은 했으나 부족하다는 느낌

현 정부는 지역 문화 거버넌스 확립과 문화도시 2.0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며, 2023년 '문화로 여는 지방시대'와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문화의 사회적 역할과 자립 기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문화·예술 진흥, 창작 지원, 주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사업 추진, 예술인 육성, 지역 문화 거버넌스 구축 등 지역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높여온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5년간 문화도시 중 사업에 집중해 왔지만,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응을 하지 못했다.

□ 최근 위기 상황이 더욱 빠르게 심화→문화재단 취약

문체부의 지역문화진흥 정책 사업 예산이 2023년 476억 원에서 2024년 22억 원, 2025년 16억 원으로 대폭 감액되며 지역 현장의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표> 연차별 문체부 지역문화진흥 정책 사업 예산

(단위 : 억 원, %)

구분	23년	24년	25년(안)
예산	476	22	16
증감액	-	△ 454	△ 6
증감률	-	△ 2,063.6	△ 37.5

특히, 기획재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집행이 6조 5천억 원 규모로 보류되면서, 지방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연금 의존도가 높은 전국 문화재단은 2년 연속으로 예산이 약 30%가량 삭감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표> 기초문화재단 총예산에서 출연금 비율

(단위 : %)

평균	2023년	2022년	2021년	2018년	2017년
74.0	77.7	73.3	78.7	68.8	71.7

□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는 상황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는 상황에서,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간의 협력은 역할 분담과 효율성 제고, 자원 및 정보 공유, 문화 격차 해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광역문화재단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수립과 대규모 사업을, 기초문화재단은 주민 밀착형 사업을 담당하며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협력을 통해 재정, 인력, 문화 자원의 중복을 줄이고,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 **협력의 목적과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간 협력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협력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정의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목적이 불명확하면 협력의 가치는 축소될 수 있으며, 방향성이 없으면 각 기관의 노력이 분산되고 중복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협력의 목표는 지역 문화 정책의 효율적 실행과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조성에 맞춰야 하며, 방향성은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과 자원의 유기적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정리**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간 협력이 어려운 이유는 역할 분담의 모호성, 형식적인 협력 체계, 재정적 한계, 전문성 부족, 자율성 침해, 지역 간 역량 격차, 제도적 기반 부족, 거버넌스 부재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저해한다고 말해왔다. 이러한 생각을 깨며 문화재단이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과 사업을 기획하는 역할을 광역과 기초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까?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문화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문화재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에 풀리지 않은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

○ **문화재단이 선택적으로 고민해야 할 법정 계획들-담아내기**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지나칠 게 많은 계획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무감각과 무관심을 다시 되짚어볼 시점입니다. 지역문화진흥, 예술진흥, 문화산업 등과 관련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시행계획만 해도 약 10개 내·외에 달합니다. 그동안 단순히 복사와 붙여넣기로 대응해 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법령문화	계획 명	주기	위원회명	시행계획		국회 보고
				유무	평가	
여가활성화법	여가활성화 기본계획	5		○	○	×
문화기본법	문화진흥 기본계획	5		○	○	○
문화다양성법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기본계획	4	문화다양성위원회	○	○	○
인문학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기본계획	5	인문정신심의회위원회	○	○	×
국어기본법	국어 발전 기본계획	5	국어심의위원회	○	○	○
점자법	점자발전 기본계획	5		○	×	×

한국수화언어법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	5		○	○	○
국제문화교류법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5		○	○	×
문학진흥법	문학진흥 기본계획	5	문학진흥정책위원회	○	×	×
장애예술인지원법	장애예술인 문화활동 지원 기본계획	5	장애예술인 문화활동지원위원회	○	×	×
공연법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5		○	○	×
공공디자인법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5	공공디자인위원회	○	×	×
공예문화산업진흥법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5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	×	×
서예진흥법	서예진흥 기본계획	5		○	×	×
문화예술교육법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5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	×	×
지방문화원법	지역문화원 지원 육성 기본계획	5		○	×	×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5	지역문화협력위원회	○	○	×
도서관법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5	국가도서관위원회	○	○	×
아시아문화도시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포상 종합계획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포상위원회	○	○	○
문화산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5		○	×	○
콘텐츠산업법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3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	×
애니메이션산업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0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	×	×
영화비디오법	영화진흥 기본계획	0	영화진흥위원회	○	×	×
이스포츠법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5	이스포츠진흥위원회	○	×	×
만화진흥법	만화창작 및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5	만화진흥위원회	○	×	×
음악산업법	음악산업진흥 종합계획	5		○	×	×
독서문화진흥법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5		○	×	×
합계				27	11	6

□ 사업에 대한 협력과 연대와 함께 체계화 필요-체계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2021년 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라 시도 단위로 설치된 제도로, 지역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위원회는 지역 문화 정책의 분권화를 촉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정책 수립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 문화 거버넌스 구축과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내에서 활동에 대한 이력이 잘 확인되지 않고 있다.

□ 광역문화재단이 문화정책을 기획하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 기대

앞서 발제 내용에서 인천시 등 기존 사업들과의 연계와 인천문화재단이 추진하는 협력사업 외에 기초문화재단은 광역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정책을 선도적으로 기획하며, 지역 간 협력과 문화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강화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16. _ 부평문화재단 부평문화포럼

도시에 '생기'를 더하는 지역문화/재단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성낙경(사단법인 마을예술네트워크 이사장)

도시에 '생기'를 더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또 그 일을 하는 지역문화/재단은 어떤 일을 할까요? 무엇이 '생기'를 만드는 힘(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작용해서 도시에, 지역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까요?

도시에 '생기'를 만들려면 첫째, 지역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둘째, 그들의 욕망, 셋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1. '오지라퍼' 네트워크 만들기

목적없이 오지랖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예술가, 생활문화 활동가, 지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 등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각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서로 만나고 서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북의 공탁은 그런 의미로 12년 동안 특별한 형식 없이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5년은 매월 만나서 인사만 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누구입니다'라는 인사로 2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북에 사는 예술가들을 시작으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공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및 연극과 관련된 일을 하는 연극인, 문화기획자, 연구자, 건축가, 음악가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를 하는 엄마들, 경력 단절된 여성, 아동·청소년, 학교 선생님, 시민 활동가, 동네 어르신 등 지역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각자의 관심사와 고민을 나누며 관계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신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2. 욕망의 발현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자신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욕망을 드러냅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만드는 축제, 지역 예술가들의 거주 문제를 해

결한 예술인 주택, 버려진 공간을 지역 공유 문화공간으로 전환한 프로젝트, 지역 학교 재단, 복지재단의 문제에 연대, 학교 예술교육 참여 등 지역의 다양한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누군가가 제안한 일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꿈꿔보고 그 꿈을 실현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 '작당모의'할 거점 공간

공간은 네트워크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하고 수다 떨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재미있는 일이나 놀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기도 합니다. 서울의 마을예술창작소(이하 마술소)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한 공간 지원정책사업입니다. 공공 공간 제약이 없는 민간 운영 공간이지만, 지역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공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골목에서 공공예술을 실험하고자 했던 모기동 '마을카페', 지역 미술관을 고민했던 서대문 '닷라인 TV', 마포 청년들이 지역살이를 위해 만든 '릴라', 여성들의 공동 육아와 경력단절 문제를 고민했던 성북 '정릉행복한 창작소'와 '길음예술사랑방', 지역 청소년 공간인 송파 '즐거운가', 예술가와 미싱 여성들이 함께한 영등포 '문래예술공방' 등이 초기 공간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10년간 165개(누적 400개소) 공간이 지원을 받았고, 지원이 끝난 2022년 이후 2024년까지 80여 개소가 공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술소는 각 공간들의 운영위원회 구성, 전체 마술소 네트워크 활동,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문 등을 진행하며 지역 공간으로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운영자들의 고민을 담아 다양한 욕망과 모습으로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마술소로서 공통점을 찾고 개인의 공간이 아닌 지역의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구자들이 마술소를 알게 되면 이 사업을 응원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잘 설계된 정책사업이었습니다. 현장 운영자들과 전문가 그룹 간의 소통, 신뢰, 협력이 잘 이루어져 진행되었습니다. 마술소 사업은 단순한 공간 지원을 넘어, 지역의 작은 공간들이 사람들을 연결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욕망을 실현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거점 공간의 중요성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마술소는 이후 인천의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포항의 '삼세판', 광주 '아트뱅크' 사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럼 지역문화재단은 누구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서 발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지역의 지형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지형이는 정원을 직접 설계하거나 가꾸지는 않지만, 다양한 식물들이 뿌리내리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정원에 어떤 나무와 꽃을 심을 것인가를 설계하고 가꾸는 것은 정원에 살고 정원을 누리는 지역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한 'n개의 서울' 사업처럼 마술소 사업도 모두 각각 공간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공통된 지향만을 유지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지원하는 행정의 간섭은 최소화하면서 현장의 자율성을 지키고 유지했던 사업입니다. 부평의 지역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일은 '오지라퍼'들을 찾고 서로를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과 더불어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의 욕망을 드러내고 실현할 수 있는 공간과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거나 세련된 꽃을 피우지 못하더라도,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사람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평의 지역문화를 기획하고 이끌고 가는 부평문화재단이 아닌 사람과 공간(장) 있는 지역 토양을 만들고, 그리고 가공은 '다정한 참견자'로 사람들의 기획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주고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지역문화재단 이길 기대합니다.

문화재단
문화두레
시민회
문화재단
활아가는문화마을

공연장
대관지원
부평영
아티스트
지역유지선지원사업
신안국

부평문화포럼

안녕하세요, 부평구문화재단입니다.

스물, 2026년부터 부평구문화재단은.

발행처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발행일 2025.1.16.

발행인 대표이사 이찬영

편집인 기획경영본부장 배윤수

기획총괄 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팀장 김유정

기획편집 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팀원 문희원

문의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팀(032-500-2013)

